

“광주·대구, 무산위기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나서야”

국감 현장 - 광주시

이형석 의원 촉구... 불씨 재점화 주목
강기정 시장 “홍준표 시장 만나겠다”
홍준표 시장 “양 시의회 통과 우선”
복합쇼핑몰·아이파크 붕괴사고
결식아동 급식비 대책 등도 주문

무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사업이 국정 감사를 계기로 부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였는데, (광주·대구)시의회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며 “대구와 광주 아시안게임 유치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했던 것처럼, 2038년에는 광주에서 남북한이 함께 하는 평화의 아시안게임이 됐으면 한다”며 “영호남의 오랜 숙원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도 광주와 대구의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큰 힘이 됐다”면서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단 광주시와 대구시 부시장들이 만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홍준표 시장을 직접 만나겠다”면서 “현재는 경제효과만 따지면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대구시청에서 반대하거나 대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대구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공동유치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복합쇼핑몰 유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속 대책,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가정 밖 청소년쉼터 확충 등을 촉구하는 지적 등도 있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을 두고 “민간 투자 사업을 불모로 정부에 900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화장실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는 안 된다”며 대선과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과 결식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촉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우택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대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나”고 질문한 뒤 “광주시에서 ‘플랜B’까지 준비하고 철거와 재시공 후 입주자 지원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조용천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고 뒤에서는 안면물수한다”며 “대형인재가 발생하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확실한 문책, 배·보상, 모든 비용의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8%에 달하는 광주지역 외식비 인상을 고려하면 올해 광주시 결식아동 급식비 700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강기정 시장께서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하신 두꺼운 돌봄의 실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이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천한 광주 가정 밖 청소년 규모는 3000여 명이지만, 청소년 쉼터는 5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 쉼터 정원이나 차서 청소년이 입소하고 싶어도 들어가 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육군 국정감사에 불참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야당 탄압 정당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

“수사 쟁길 정도로 한가지 않아요”

“전 정부 언론사 며칠씩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지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쟁길 정도로 한가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취재 경위 확인을 위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종북 수사파’ 발언에 대한 야당 반발에는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원의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는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진석號 ‘당협 정비’ 내부 잡음에 속도조절?

“반대파 숙아내기”...비운계 반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져본 파동 수습을 계기로 ‘조직 정비’ 드라이브 결기에 나섰지만 내부 잡음이 잇따르며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차적으로는 비운계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개 반발 기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임시 지도부 성격의 비대위가 중장기적인 ‘조직 관리’의 영역까지 손을 댈다면 여론 주류 내부에서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당협위원장 인선은 당대표를 선출할 차기 전당대회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2024년 총선 공천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

이다. 특히 기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당무감사 전망에 비운계에서는 “반대파 숙아내기”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물론, 친운계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의 내부 정비 타임라인에 변화가 예상된다. 관측이 나온다. 국정감사 직후부터 사고당협 공모와 함께 당무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에서 한 발 물러나 당내 여론 추이를 살피며 ‘속도 조절’을 시도하리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비운계에서는 연일 공개 반발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이번 당협 재정비 시도가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도.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1%...2주만에 2%p 올라

NBS...국힘 당대표 유승민 1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30% 초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사트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인 2주 전(29%)보다 2%p포인트(p) 오른 3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p포인트 내린 59%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8월 4주차부터 9월까지 30%대를 유지하다 직전 조사인 10월 1주차에 29%대로 내려앉았다가 이번에 2%p포인트 오르며 다시 30% 대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 ‘외교참사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일부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1%p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2%로 2주 전과 같았다. 정의당은 5%였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관한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뽑은 응답이 26%로 가장 높았다.

안철수 의원-나경원 전 의원이 각 10%였다. 김기현 의원은 3%, 주호영 원내대표는 2%로 나타났다.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49%, 반대가 3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슬로건 일반부 [우수작]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광주교육** 한 순간도 놓지 않는 **청렴실현**

